

“수사 무마 대가 사건 브로커에 10억여원 건넸다” 증언

광주지법서 '사건 브로커' 증인신문

검찰이 구속 수사 중인 사건브로커 A씨가 검찰 수사관과 고위 경찰들을 통해 사건을 봐주겠다고 금품을 받았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증인들은 “검·경 고위직 인맥을 자랑하기 위해 시사자리에 불려나기도 했고, 실제 사건을 무마 해준 적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 심리로 5일 202호 법정에서 열린 사건브로커 A(62)씨와 공범 B(63)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10월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A·B씨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사기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코인 사기범 C(44)씨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원을 수수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고가의 외제 차와

금품 제공자 “2020년 12월 9일 검·경 인사와 식사자리서 인사비 1억 줘”
“같은 달 22일 차량에 현금 5억 실어주고 27일 식당에서 또 5억 전달”
실제 사건 무마해준 적 있어... 새로운 검경 관계자·정치권 인사도 언급

현금 등 15억 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고, B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 30일까지 같은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증인은 A씨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한 C씨와 C씨의 동생 D씨, 공범 B씨 등 총 3명이다.

C씨와 C씨의 동생은 B씨를 통해 A씨를 소개받았다고 했다.

지난 2020년 12월 9일 A씨는 검·경 고위직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인사비 비용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들 형제의 증언이다.

당시 이들은 A씨가 구속된 검찰 수사관, 치안감으로 퇴직한 당시 경무관, 정치인 관계자 등과 모여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현금 1억원을 쇼핑

백에 담아와 D씨가 식당 주인을 통해 A씨의 차량 키를 받아 A씨 차량의 트렁크에 넣어주고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다.

추후 B씨가 ‘사건을 깔끔하게 해결 하기 위해 돈을 쓸까’를 주기도 10~15억원 가량의 목돈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D씨에게 요구하자 D씨는 형인 C씨와 직접 만남을 주선했다.

이에 지난 2020년 12월 22일 이들 4명(A·B·C·D씨)은 광주시 서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만났다.

C씨는 당시 소유하고 있던 5억원의 현금을 캐리어에 담아갔지만 전달을 할지 결정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경찰들 접대를 해야하고 골프모임을 하려면 회원권을 사야 하는데 목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는 것이 이들 형제의 기억이다.

과거 강남경찰서 등의 수사에 도움을 준 것들이 있던 터라 C씨는 이날 A씨를 믿어보기로 하고 동생 D씨를 통해 A씨의 차량에 현금 5억원을 실어줬다고 진술했다.

5일 뒤인 2020년 12월 27일 C씨는 가지고 있는 코인을 환전해 5억을 마련해 CCTV가 있는 곳에서 이를 B씨에게 확인시켜주는 장면을 찍고 난 뒤 동생과 함께 A씨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5억원의 현금이 든 캐리어를 전달해줬다.

이 돈으로 A씨 변호인은 C씨 법률 대리인으로 광주지역 검사장을 지낸 변호사 등을 선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 변호인은 C씨 측에 일부 금액을 반환했다고 주장 했지만 C씨 형제는 일부 반환금에 대해 부인하거나 사정이 좋지 않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도움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재판에 넘겨진 혐의와 관련, 검찰은 A씨가 검찰과 경찰 고위직과 친분을 통해 수사내용을 빼내거나 수사 무마 청탁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광주지검, 서울경찰청 등을 압

수수색 하고, 현직 검찰 수사관 한 명과 전직 경무관을 구속기도 했다.

이밖에 검찰은 A씨가 경찰 인사비리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 전남지역 전 경찰 한 명을 구속하고 인사 청탁을 한 혐의가 있는 경찰들에 대해서도 압수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전 치안감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 1일 검찰이 수사 무마와 관련한 현직 경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A씨가 지자체의 공사 비리에 관여된 정황을 두고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남 22개 지자체에 A씨와 지인들의 업체 7곳과 맺은 관급공사에 계약 내역을 들여다 보고 있다.

한편 C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비상장주식, 미술 NFT 연계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수법 등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8억 여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로 구속기소돼 8일 광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목포해경이 5일 전복된 채 발견된 중국 선적 어선을 수색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신안 앞바다서 중국 어선 전복된 채 발견

중국서 사고 후 떠밀려 온 듯

중국 해상에서 사고를 당한 중국 선적 어선이 전복된 채 신안 앞바다까지 떠밀려왔다.

목포해경은 5일 오전 10시께 신안군 태도 서쪽 38km 해상에서 선박(100t급 목선)이 전복된 채

표류 중이라는 신고를 받았다.

현장에서 발견된 선박은 중국 선적으로 추정되는 목선 어선으로, 사고 해역 주변에는 어망과 밧줄 등이 흩어져 있었다.

해경은 선박을 두드리는 등 방법으로 선내에 생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으나 생존 신호를 확

인하지 못했다.

해경이 중국 RCC(구조조정본부)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이 선박은 최근 중국 해상에서 사고를 당한 선박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승선원들은 중국 측 기관을 통해 전원 구조됐으며, 선주는 선박 인양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선박을 바다에 완전 침몰시킬지 인양할지 여부를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주정차 단속기록 조작 서구청 공무원 4명 징역형

광주지법, 집행유예 1년 선고

주민들이 단속카메라에 불법 주·정차로 1분만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기초의원 등 유력 인사와 담당 공무원, 지인 등에 대한 특혜성 면제를 관행적으로 되풀이해온 광주시 서구청 소속 공무원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5일 공전자기록변작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서구청 공무원 4명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2020년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를 삭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지인들은 과태료를 면제받았다. 이번에 법정에서 3명은 주·정차 단속 기록 조작

을 청탁받고 주정차 단속 기록에 면제 사유가 되는 허위 사실을 입력하는 수법을 썼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으나,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개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는 광주 서구청 직원들이 전·현직 공직자 52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75건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는 부과된 과태료를 적절하지 않은 사유로 면제한 사례가 총 4169건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결과로 서구청 5급 이상 공직자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고, 6급 이하 직원 28명도 경징계를 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서 71억원 전세사기 50대 구속기소

광주에서 7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50대가 법정에서 서게 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성희)는 전세계약을 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빼돌린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 일대에서 아파트 65채를 지인들의 명의로 매입해 세입자에게 전세를 내주고 보증금 71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족과 지인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매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전세

를 내주고 보증금을 받아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면서 법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증금을 가로채 수십 개의 명품과 사치품을 사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세사기범 A씨에 의한 피해자들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지원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과 청년에 큰 고통을 주는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하고 공소유지에 만반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